VISION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서민경제 · 자영업자 고달픈 생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살림살이 지원, 소외계층 경제활동 지원

5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
-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 공공부문 채용, 계층할당제 도입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 저소득층 자녀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6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동네 가게가 살아납니다'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 생계형 서민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소상공인 창업과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
- 소상공인공제제도, 정부출연료 지원 대폭 확대
-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7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피는 웃음꽃'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 서민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취급 확대
- 신용회복기금 설립
- 연체 고금리사채 대응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대폭 강화

VISION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목표 5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급여보장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급여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6 AM 페이지 82 western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 자활인센티브제도 도입

모두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복지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활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자활장려금·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 적용하여 빈곤층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효과적인 기본생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채용, 계층할당제 도입

정부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낮은 교육수준, 경제활동 기회의 부족 등에 처해 있는 빈곤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정부가 나서서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능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터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빈곤계층을 위한 의무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빈곤층에 대한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으로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실시기관에 인센티브, 표창, 인증서 수여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6 AM 페이지 84 western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장기 공공 임대주택 거주 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상태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유가상승, 내수위축, 생필품가격의 잇따른 인상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영세민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체 가구의 43%(615만)가 무주택 세대로 주기적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 수준(3인 가구 최소 8.8평, 방 2칸, 부엌, 화장실)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이중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확충이 필요합니다.

- **맞춤형 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대폭 확대·조정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의무비율은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완화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분위와 미달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지원 및 주택개량을 통한 방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월임대료 보조, 보증금 분납허용 등의 지원과 함께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의 월세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하겠습니다. 임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제로 동일한 세입자에 한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상률을 제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최근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연탄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석탄수급안정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가격의 인상을 추진, 저소득층의 난방비부담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난방비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6 AM 페이지86 western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지원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빈곤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취학전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 교육, 보건, 여가·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빈곤층 미취학아동(0~5세)에 대한 조기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이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보육·교육·문화 등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국 시·군·구에 공무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부지원의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설치하여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협력·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수행중인 32개 지역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별 드림스타트 모형을 개발하고 수행체계를 확립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드림스타트 수행기관(국공립보육시설 등)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전국 100개 지역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에 232개 지역(시·군·구당 1개소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6 AM 페이지 88 western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검토

저소득층의 경제능력 부재, 취업상황 악화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기금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상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근로 장학생제 등을 총괄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맞춤형 장학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립대학 융자, 대학재정 관리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장학지원 근로장학생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정범위 내에서 기초수급권자는 무상장학금, 소득 2분위 학생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소득 5분위 학생에게는 저금리 금리보전 시행으로 소득계층별 맞춤형 장학재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근로장학생제는 4년제 대학까지 시행, 지원단가 상향 조정(현행 200만 원), 전체 대학생의 0.5%씩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후 향후 소득발생 시점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지방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도시지역 학생들 못지않은 교육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줄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및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할당과 장학금 지원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 저소득층 자녀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 고교에 저소득층 학생 약 70%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재원을 통해 입학생의 30%에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 고등학교는 현행 시·도의 저소득층 학생(기초 및 차상위)들에 대해 등록금 및 수업료를 포함한 학교운영지원비, 학습 부대경비 등 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VISION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목표 6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동네 가게가 살아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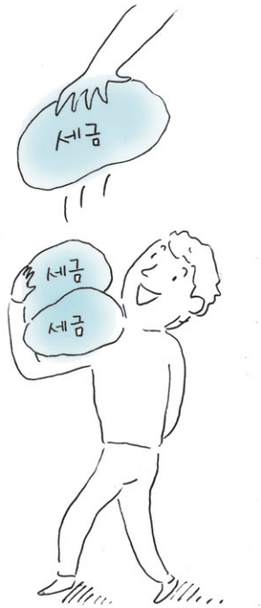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 영세상인 세금 경감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실질적인 생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을 인상하여 영세상인들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기초생활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6 AM 페이지92 western

생계형 서민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카드수수료율이 자영업자 등 생계형 서민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불리한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규모에 따른 카드수수료의 차등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적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카드사의 원가 재계산 등을 통해 수수료체계를 점검하여 조정·검토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등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제도권의 금융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들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회사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제한을 대폭 완화해 저신용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전담금융회사로 거듭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영세자영업자 전담보증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금융소외계층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을 보완하는 전담보증기관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한 보증재원 확충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지역신보가 주체가 되어 1조원규모의 영세자영업자대상 특례보증을 실시하며 자금수요가 급한 영세자영업자에게 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7 AM 페이지94 western

소상공인 창업과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8.4%를 차지하여 비중이 매우 높으며, 경기에 민감하여 소비둔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매점·음식업 등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 심각하고 서비스마인드 부족으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 민생경제의 튼튼한 근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에게 창업정보 및 유망아이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DB 업데이트 및 부가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5억 원 규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2개)의 상담사(245명)를 활용하여 창업상담, 정보제공, 교육 등 준비된 창업을 지원(114억 원)하겠습니다.

■ **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에게 컨설팅, 교육, 현장실습,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의 5단계 패키지형 지원(1천 명)을 실시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하겠습니다(15억 원).

■ **5대 광역시에 소상공인의 유망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호·포호 창업지원센터'를 건립, 성과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이해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및 방송통신위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채널을 개국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단계적 축소방침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자금의 단계적 축소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 강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조직의 체계화·효율화를 통해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7 AM 페이지96 western

소상공인공제제도, 정부출연료 지원 대폭 확대 / 5년간 300억 원의 정부출연금 지원

영세자영업자는 단독 또는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4년 현재 241만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소비둔화, 경기의 양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이제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소상공인공제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300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지역별 상권 특성화·전문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상권을 중심으로 시장과 상점가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해 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2천 억 원 현대화 예산을 지원하여 1시장 1주차장 건립, 공중파·케이블 TV 활용한 이벤트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문 및 배송시스템 구축, 지역단체와의 제휴 등을 통한 판로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입점시 주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반영하고 지역설명회 도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7 AM 페이지98 western

전통시장 활성화

지난 5년간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 562개 시장에 7,136억원으로 노후시설 개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개선시장에서 매출증가, 빈 점포율 감소 등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매출감소시장이 54.2%에 이르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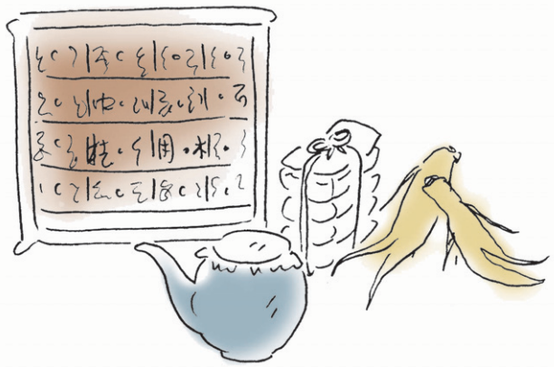
■ **전통, 관광 등 테마와 연계한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심지 시장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테마형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방시장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 인근 시장을 묶어 지역상권을 개발하겠습니다.** 대도시에는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있는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권개발모델을 연구('07년~'08년 3월), 전국상권실태조사('08년 3~5월), 「재래시장법」 개정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영세상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및 신용보증공급 여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건실한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영세한 장애인기업 특별보증('08년 9월) 및 저신용계층(영세상인 등)에 특별보증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보·시중은행간 협약체결을 통해 특례보증을 추진('08년 5월), 지역신보 보증공급 2.8조 원, 보증잔액 5.3조 원을 연중 달성하겠습니다.

■ **고객이 즐겨 찾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시장 1주차장을 건립, 전국형·지역중심형 시장에 향후 5년간 주차장 350개를 건립하여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 70%로 확대하겠습니다.('08년 3월 현재 43%)

■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전통시장 가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을 장려하겠습니다.



VISION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목표 7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피는 웃음꽃'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 서민 자금수요 지원

신용도 낮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은행보다는 서민금융기관 또는 정부의 정책자금 등이 담당해 왔으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무담보 무보증 소액서민 금융재단(Microcredit Bank)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기금조성을 통한 자금조달지원과 함께,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영세서민의 창업지원과 생활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부과, 전문성강화 등 제도정비를 통해 지속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소액서민대출 전담보증기관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의 한계 등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보증재단의 보증을 활용하겠습니다.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용이 낮은 계층 중 상위등급자에 대해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용정보 및 표준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으로 리스크관리능력의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7 AM 페이지 102 western

서민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취급 확대 / 서민금융 이용의 편의 제고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 및 정책자금 취급창구에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주 영업기반인 서민금융기관이 배제되어 영업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연금 및 정책자금의 취급은 은행, 농·수협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채널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 행정자치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법규 등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포함시켜 국가정책자금을 충분히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급여수령기관을 다원화해 급여수령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점포설치규제 등 업무규제를 완화하여 폭넓게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기금 설립 / 금융소외자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신용등급 7~10등급, 720만 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상환능력 부족채권의 매입, 연체원금 상환일정 재조정 및 성실한 대출상환자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금융소외자가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소외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7 AM 페이지 104 western

연체 고금리사채 대응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 채무 성실이행자 연체기록 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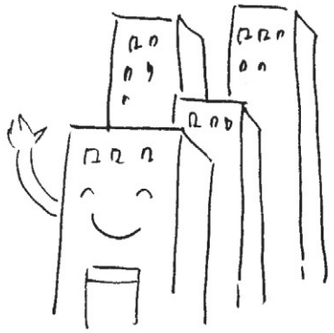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계부채와 개인파산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건전한 경제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개인회생, 파산절차 및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뉴 스타트(New Start) 2008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기왕에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개인별 납부연금보험료 및 경제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최대 29만 명 수준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활용하겠습니다.(본부 및 전국 19개 상담소)

■ **사금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채권매입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연체된 고금리사채의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로의 전환 등 고리사채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일정 기간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사실상 신용불량자 표시인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혹한 빚 독촉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통화와 협박 등 비정상적 빚 독촉을 금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법률안(「공정채권추심법」)을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신용불량자 5천 명 이상에게 개인회생신청 지원 등 원스톱 법률구조를 제공하겠습니다.



(FQ)02한 나라 본 책(78~107) 2008.3.29 5:7 AM 페이지 106 western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대폭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주택경매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확대로 무주택 서민층을 보호하겠습니다(현행 지역에 따라 1,200만 원~1,600만 원을 10~20% 인상, 341만 서민세대 혜택). 1년에 12%까지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상한을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 **형사판결에 부가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서민생활을 배려하겠습니다.** 사회봉사를 주말 및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생업지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영역을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 등으로 확대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예상 혜택인원 연간 2만 8,200명)

■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현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성별·연령·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손해배상 외에도 차별중지 명령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